

의안번호	제 2008 - 6 호
의 결 연 월 일	2008. 4. 28. (제7차 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 차 례 >

I.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1
II. 양형자료조사 2차 분석	30
III. 전문위원 업무 지원	31
IV. 연간보고서 발간	34
V. 온라인 설문조사 시행	35

☐ 별첨 양형자료조사 2차 분석 보고



I.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1. 개요

- 2004. 3. 1. ~ 2007. 2. 28. 3년 동안 전국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피고인 684,294명 중 약 7만 명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실시
- 2007. 10. 8.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양형자료조사 실시계획 및 입력시스템 개선의 건’(의안번호 제2007-10호)이 의결됨에 따라 시행

2. 의결 내용

가. 대상 사건

- 3년 동안 전체 범죄 중 범죄발생빈도 수가 적은 범죄를 제외한 모집단으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한 후 중요도를 감안하여 조사대상 사건을 결정함

나. 조사 기간

- 위원회 의결 이후 양형자료조사에 착수하되, 원칙적으로 2008. 2. 29.까지 조사를 완료하도록 함
- 다만, 추가 양형자료조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조사방법

- 1차 조사
 - 2007. 10.부터 2007. 12. 말까지 약 3만 건을 범죄유형별로 조사

○ 2차 조사

- 2008. 2. 말까지 나머지 약 4만 건을 범죄유형별로 조사

라. 입력시스템 개선

- 양형자료분석관 입력시스템을 양형인자를 보충하는 등 개선하여 양형자료를 입력하기로 함
- 다만, 양형인자는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회의 점검을 받도록 함

3. 양형자료조사 경과

가. 양형조사표 정리

- 운영지원단이 양형조사표를 검토, 정리한 후 수정된 양형조사표를 전문위원 회의에 제출하여 의견 수렴
 - 전문위원 1팀 제3차 회의(2007. 10. 29.)
 - 전문위원 제4차 전체회의(2007. 11. 2.)
 - 2007. 10. 25. ~ 11. 9. 전문위원 서면 의견서 제출
- 2007. 10. 25. ~ 11. 1. 운영지원단 모의 양형자료조사 실시
- 2007. 11. 16. 양형위원회 제1차 임시회의에 양형조사표 보고
 - 공통 양형인자표
 - 78개 범죄유형에 대한 개별 양형인자표(38개 주요범죄 + 40개 추가범죄)

나. 양형자료조사 착수

- 양형인자표 정리가 지연됨에 따라 2007. 11. 19.이 되어서야 양형자료조사 착수

4. 조사팀 구성 및 조사자 교육

가. 조사팀 구성

- 운영지원단은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팀 체제’를 도입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였음
 - 업무 성격상, 다대한 인력의 투입만으로 효과적이고 정확한 조사 업무의 수행을 보장할 수 없음
 - 조사팀 내부 및 운영지원단과의 사이에 긴밀한 의사소통 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 제한된 조사 장소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 수가 한정됨
- 전국을 고등법원 단위로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7개 팀 구성
 - 서울고등법원 관할 지역 3개 팀, 조사자 각 10명 정도
 - 대전, 부산, 대구, 광주고등법원 관할 지역 4개 팀, 조사자 각 10명 정도
 - 연인원 합계 약 140명의 조사요원이 실제 조사 업무를 담당하였음
- 2008. 1. 2. 조사팀 재구성
 - 2008. 1. 11. 조사자 인사발령으로 재구성
- 서기보 발령대상자를 조사요원으로 채용하여 조사 시행
 - 고도의 업무처리 능력을 확보·유지할 수 있었음
 - 단기간의 고용형태임에도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유지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였음

나. 조사팀 교육

- 목적
 -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재경 지역
 - 2007. 11. 16. 10:00 ~ 17:00 대법원 3층 정보화 교육장

○ 대전이남 지역

- 2007. 11. 19. 13:00 ~ 18:00 대전고등법원 10층 중회의실

○ 추가 교육

- 2008. 1. 3. 13:30 ~ 17:30 대법원 3층 정보화교육장
- 2008. 2. 20. 14:00 ~ 18:00 대법원 5층 회의실
- 조사팀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추가 교육 실시

○ 대구 지역

- 2008. 2. 11. 13:30 ~ 17:30 대구고등법원 4층 대회의실
- 대구지역에 조사공간을 확보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조사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별도로 교육 실시

5. 조사 내역

가. 개요

- 조사 기간 : 2007. 11. 19. ~ 2008. 3. 28.
- 조사 건수 : 42,371건
- 조사 장소 : 전국 39개 검찰청 본청 및 지청
 - 법관 5인 이하인 지원 사건의 경우 우선 조사 대상에서 제외

나. 구체적 조사 내역

○ 법원별 조사 내역

- 법원별 조사건수는 ① 대구(3,743건), ② 서울중앙(3,418건), ③ 부산(3,408건), ④ 인천(2,224건), ⑤ 창원(1,806건) 등의 순서로 나타남

- 구체적인 조사기간 및 조사건수는 다음 표와 같음

○ 조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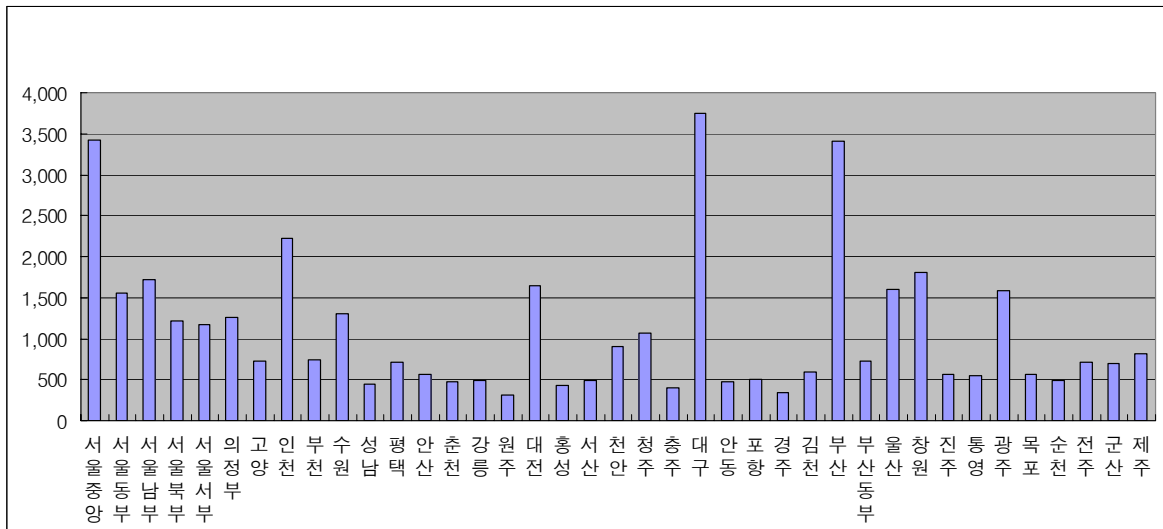
(2008. 3. 31. 기준 / 단위 : 건, 명)

법원	조사건수	전체 표본	조사기간	조사인원
서울중앙	3,418	5,716	07.12.26.~08.2.20.	7
서울동부	1,551	2,417	07.11.19~07.12.17.	8~10
서울남부	1,722	2,792	07.11.19.~07.12.21.	7~10
서울북부	1,210	2,408	07.12.26.~08.1.18.	10
서울서부	1,168	1,874	08.1.4.~08.1.18.	10
의정부	1,265	2,238	08.1.21.~08.2.11.	8
고양	720	1,358	08.2.25.~08.3.7.	7
인천	2,224	4,196	08.1.21.~08.2.27.	7
부천	742	1,212	08.3.10.~08.3.21.	7
수원	1,298	3,559	08.2.21.~08.3.17.	7
성남	448	1,745	08.2.28.~08.3.10.	5
여주	0	543	-	-
평택	707	909	08.3.24.~08.3.28.	10
안산	557	1,826	08.3.11.~08.3.21.	5

법원	조사건수	전체 표본	조사기간	조사인원
춘천	473	712	08.2.12.~08.2.18.	7
강릉	492	678	08.2.19.~08.2.22.	7
원주	305	713	08.3.18.~08.3.21.	7
대전	1,642	2,247	07.11.20.~07.12.18.	10
홍성	428	617	08.1.23.~08.1.29.	10
서산	489	604	08.1.30.~08.2.5.	10
천안	899	1,255	07.12.20.~07.12.31.	10
청주	1,071	1,611	08.1.2.~08.1.22.	10
충주	400	503	08.2.11.~08.2.15.	10
대구	3,743	5,216	08.2.11.~08.3.14.	18
안동	469	617	08.3.24.~08.3.28.	9
포항	508	855	08.3.17.~08.3.21.	9
경주	342	519	08.3.24.~08.3.28.	9
김천	589	830	08.3.17.~08.3.21.	9
부산	3,408	4,771	08.11.20.~08.1.18.	9~10
부산동부	721	1,292	08.3.7.~08.3.14.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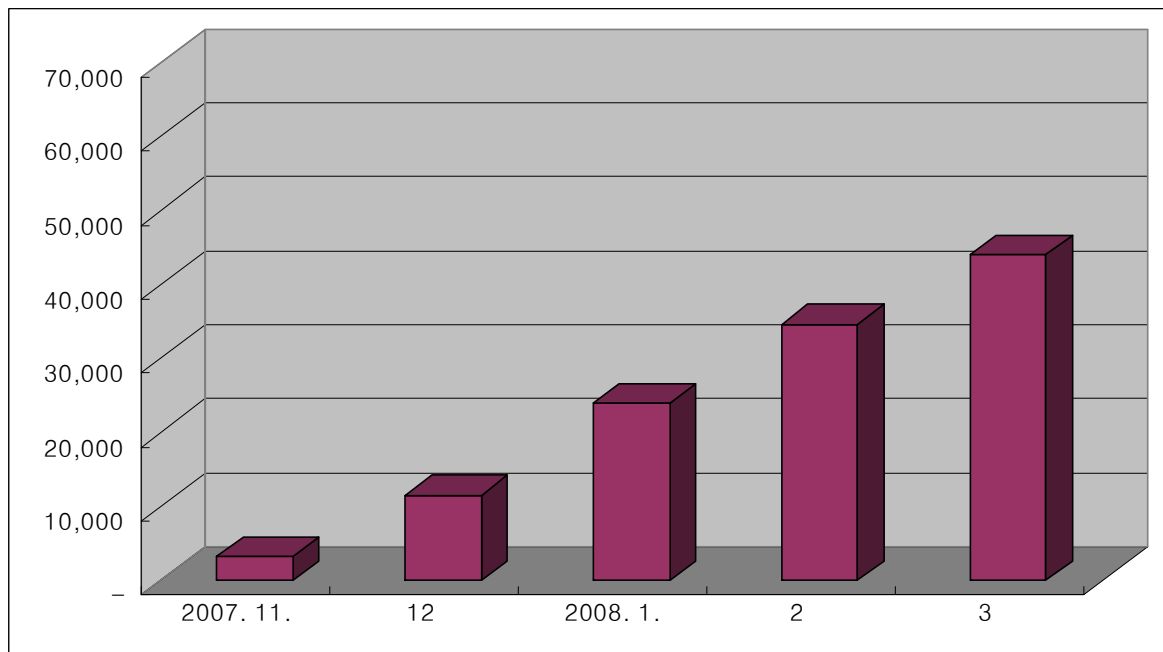
법원	조사건수	전체 표본	조사기간	조사인원
울산	1,602	2,046	08.2.18.~08.3.6.	9
창원	1,806	2,208	08.1.21.~08.2.15.	10
진주	564	935	08.3.17.~08.3.21.	9
통영	545	719	08.3.24.~08.3.28.	9
광주	1,581	2,222	07.11.20.~07.12.18.	12
목포	559	770	07.12.20.~07.12.31.	12
순천	490	1,222	08.2.11.~08.2.18.	10
전주	714	1,328	08.1.2.~08.1.18.	10
군산	690	896	08.2.19.~08.2.29.	10
정읍	0	385	-	-
제주	811	1,077	08.1.21.~08.2.4.	10
합 계	42,371	69,641		

○ 법원별 조사건수



▶ 조사건수 및 비율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판단됨

○ 월별 누적 조사건수



▶ 최초 예상보다 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는 하나, 누적 조사 건수의 증가 추이에 비추어 지금까지 조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다. 조사 지연의 원인 분석

조사 시행결과, 계획안 의결 당시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작업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그 원인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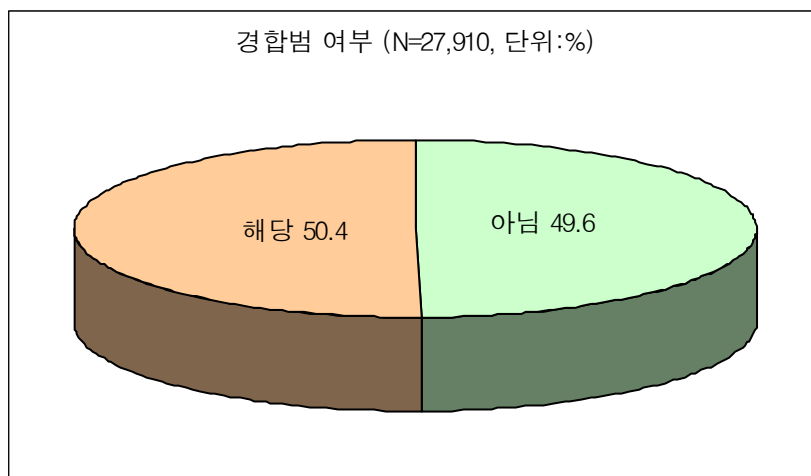
※ 최초 예상 : 매월 최소 15,000건 ~ 20,000건 정도의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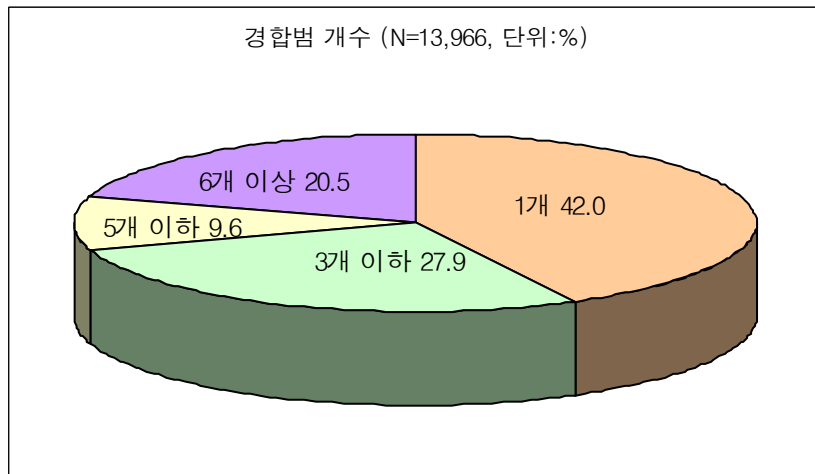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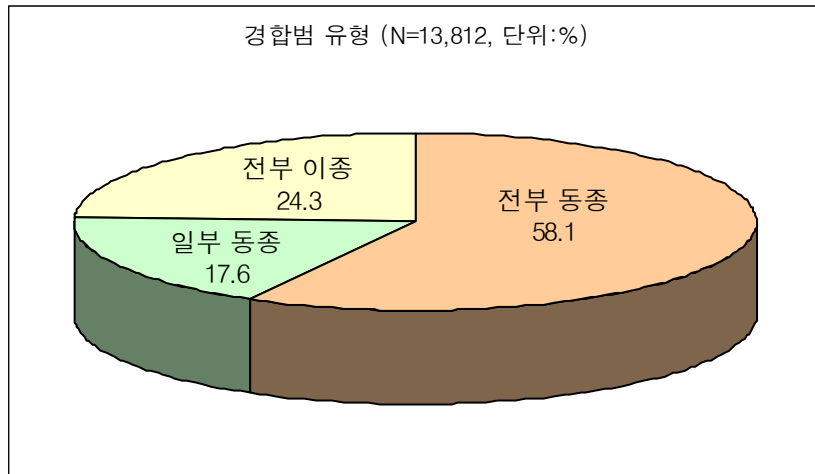
시행 결과 : 매월 8,000건 ~ 12,000건 정도 조사에 그침

(1) 높은 경합범 비율로 인하여 경합범 조사에 과도한 노력이 요구

- 양형자료조사 2차 분석에 따르면, 전체 사건 중 경합범 비율이 절반을 약간 넘고, 경합범 전체 중 이종(異種) 경합범이 포함된 사건 비율은 41.9%이고, 경합범의 수가 4개 이상인 사건 비율은 30.1%인 것으로 나타남
- 경합범 사건은 단독범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경합된 사건의 수와 성격에 따라 현저히 많은 조사시간을 필요로 함
- 결과적으로 높은 경합범 비율은 전반적인 조사절차의 지연을 초래함

◆ 경합범 여부, 유형 및 개수 ◆





(2) 양형인자 정리로 인한 조사 착수 지연

- 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바로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위원회 1차 임시회의를 통해 양형인자를 확정 한 후 2007. 11. 19.부터 조사가 시행됨
- 의결 당시 양형인자를 개선할 필요성은 인식하였지만, 쟁점으로 부각되어 조사 일정에 지연이 초래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함
- 한편, 복잡한 양형조사표도 조사절차 전반에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3) 폐기, 분실 등의 사유로 사건기록을 대출할 수 없는 경우 발생

-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양형조사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건기록을 대출받는 것이 필수임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록을 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단위 : 건)

기록 없음	조회 불가	합계
4,867	289	5,156

- ▶ 조회 불가는 검찰청에서 기록 대출을 위한 전산조회시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함
- ▶ 기록 없음은 전산조회는 가능하나, 검찰청에서의 기록 대출, 기록 폐기, 분실 등의 사유로 기록 대출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함

(4) 법인 피고사건, 항소심 무죄 등의 사유로 조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발생

- 조사대상 사건이 법인 피고사건 또는 항소심에서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건 등에 해당함이 판명되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가 발생함

(단위 : 건)

법인 피고사건	항소심 무죄 등	합계
416	66	482

- ▶ 최종심을 기준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진행하므로 항소심에서 무죄 등이 선고된 사건은 조사에서 제외

(5) 판결문 검색이 지연되거나 곤란한 경우 발생

- 법원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12,388건의 판결문에 대하여는 검찰청 보관 판결문이나 법원 보관 판결문 등본을 복사하여 지원단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우선 조

사대상에서 제외하여 후순위로 조사 순서를 변경함

- 그로 인하여 판결문 검색에 소요된 시간만큼 절차 지연이 발생

(6) 업무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연 상황 발생

- 업무 성격상, 조사의 정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신속만을 강조할 수 없음
- 조사 문항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로 팀장 또는 운영지원단에게 질의를 하여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 조사요원이 작성한 양형조사표에 대하여 팀장이 1차로 점검하고, 운영지원단에서 2차로 점검하는 등 조사시 오류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

6. 조사 현황

가. 개관

- 2008. 3. 31. 기준으로 조사된 42,371건의 관할별, 범죄유형별 및 죄명별 조사 현황을 개관함¹⁾
- 최종 분석결과는 2008. 5. 예정된 위원회 8차 회의에 제출될 예정

나. 관할별 현황

(단위: 명, %)

	피고인수	비율
고 합	3,900	9.2
고 단	31,652	74.7
고 정	6,819	16.1
합 계	42,371	100.0

다. 범죄유형별 및 죄명별 현황

(1) 개요

- 조사 빈도수가 높은 범죄유형 : ① 사기범죄(5,877건), ② 상해범죄(5,094건), ③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범죄(4,466건), ④ 도로교통법위반범죄(4,277건), ⑤ 절도범죄(3,712건)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조사 빈도수가 높은 개별범죄 : ① 사기죄(5,471건), ②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죄(2,854건), ③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2,610건), ④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2,036건), 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1,856건) 등의 순서로 나타남

1) 현재 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최종 분석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구체적 현황

○ 범죄유형별 현황

(단위: 명, %)

범죄유형	조사건수	비율
강간	778	1.8
강도	456	1.1
강제추행	311	0.7
공갈	506	1.2
공무집행방해	455	1.1
공문서	1,066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4,466	10.5
근로기준법위반	507	1.2
뇌물	147	0.3
도로교통법위반	4,277	10.1
마약	1,242	2.9
무고	326	0.8
방화	311	0.7
배임	437	1.0
변호사법위반	131	0.3
병역법위반	672	1.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502	1.2
사기	5,877	13.9
사문서	325	0.8
살인	372	0.9
상해	5,094	12.0
선거법위반	518	1.2
손괴	320	0.8
위증	212	0.5
장물	128	0.3
절도	3,712	8.8
조세	397	0.9
지적재산권	247	0.6
폭행	406	1.0
협박	241	0.6
횡령	910	2.1
기타범죄	7,022	16.6
합계	42,371	100.0

○ 죄명별 현황

(단위: 명, %)

범죄분류	사건명	조사건수
강간	강간	35
	강간미수	26
	강간상해	58
	강간치상	110
	강도강간	19
	미성년자의제강간	1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75
	성폭력범죄(강간상해)	44
	성폭력범죄(강간치상)	44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	22
	성폭력범죄(절도강간)	18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	66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38
	성폭력범죄(특수강간)	76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	67
	심신미약자간음	2
	준강간	17
	준강간미수	1
	준강간치상	2
	청소년성보호법위반(청소년강간)	55
	특수강도강간	2
	소계	778
강도	강도	44
	강도미수	26
	강도상해	153
	강도예비	25
	강도치상	26
	준강도	29
	준강도미수	2
	준특수강도	2
	특가법위반(강도)	13
	특가법위반(강도상해재범)	11
	특수강도	93
	특수강도미수	31
	특수강도방조	1
	소계	456
강제추행	강제추행	85
	강제추행상해	32
	강제추행치상	4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5

(단위: 명, %)

범죄분류	사건명	조사건수
	성폭력범죄(강제추행)	1
	성폭력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추행)	39
	성폭력범죄(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2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26
	준강제추행	73
	청소년성보호법위반(청소년강제추행)	2
	소계	311
공갈	공갈	114
	공갈미수	47
	폭처법위반(공갈)	2
	폭처법위반(공동공갈)	66
	폭처법위반(공동공갈)미수	2
	폭처법위반(상습공갈)	25
	폭처법위반(야간,공동공갈)	221
	폭처법위반(야간,공동공갈)미수	26
	폭처법위반(야간집단,흉기공갈)	1
	폭처법위반(야간집단,흉기공갈)미수	1
	폭처법위반(집단,흉기공갈)	1
	소계	506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307
	위계공무집행방해	39
	특수공무집행방해	5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57
	소계	455
공문서	공기호부정사용	41
	공문서변조	47
	공문서부정행사	36
	공문서위조	330
	공용물건손상	8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297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39
	변조공문서행사	7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17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1
	위조공문서행사	38
	특수공용물건손상	1
	허위공문서작성	21
	소계	1,06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610
	특가법위반(도주차량)	1,856
	소계	4,46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507
	소계	507

(단위: 명, %)

범죄분류	사건명	조사건수
뇌물	뇌물공여	51
	뇌물수수	68
	수뢰후부정처사	1
	제3자뇌물교부	1
	특가법위반(뇌물)	26
	소계	147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3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778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316
	소계	4,277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80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162
	소계	1,242
무고	무고	326
	소계	326
방화	업무상실화	1
	일반건조물방화	27
	일반건조물방화미수	2
	일반물건방화	24
	일반자동차방화	27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3
	중실화	1
	현존건조물방화	23
	현존건조물방화미수	19
	현존건조물방화방조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32
	현주건조물방화	5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4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36
	현주건조물방화치사	1
	현주건조물방화치상	19
	소계	311
배임	배임	117
	배임수재	53
	배임증재	42
	배임증재미수	1
	업무상배임	101
	특가법위반(알선수재)	14

(단위: 명, %)

범죄분류	사건명	조사건수
	특경가법위반(배임)	28
	특경가법위반(사금융알선)	1
	특경가법위반(수재)	21
	특경가법위반(알선수재)	47
	특경가법위반(증재)	12
	소계	437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위반	131
	소계	131
병역법위반	병역법위반	641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31
	소계	672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502
	소계	502
사기	사기	5,471
	사기미수	74
	사기방조	1
	상습사기	182
	준사기	1
	컴퓨터사용사기	45
	특경가법위반(사기)	103
	소계	5,877
사문서	사문서변조	5
	사문서부정행사	1
	사문서위조	255
	사서명위조	18
	사전자기록위작	4
	위조사문서행사	35
	위조사서명행사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5
	허위진단서작성	1
	소계	325
살인	강도살인	21
	강도치사	1
	과실치사	2
	살인	71
	살인미수	76
	상해치사	47
	업무상과실치사	86
	자살방조	1
	존속살해	23
	존속상해치사	1
	중과실치사	1

(단위: 명, %)

범죄분류	사건명	조사건수
	특가법위반(보복살인)	9
	폭행치사	33
	소계	372
상해	공동상해	2
	과실치상	2
	상해	1,413
	업무상과실치상	42
	존속상해	57
	중상해	29
	특가법위반(보복상해)	3
	폭처법위반	133
	폭처법위반(공동상해)	233
	폭처법위반(상습상해)	32
	폭처법위반(야간,공동상해)	2,036
	폭처법위반(야간,흥기상해)	2
	폭처법위반(야간상해)	22
	폭처법위반(야간집단,공동상해)	1
	폭처법위반(야간집단,흥기상해)	506
	폭처법위반(야간집단,흥기상해)미수	1
	폭처법위반(집단,흥기상해)	547
	폭행치상	33
	소계	5,094
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86
	공직선거법위반	244
	농업협동조합법위반	5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35
	소계	518
손괴	재물손괴	146
	특수재물손괴	2
	폭처법위반(공동재물손괴)	9
	폭처법위반(야간,공동재물손괴)	127
	폭처법위반(야간,재물손괴)	2
	폭처법위반(야간집단,흥기재물손괴)	9
	폭처법위반(집단,흥기재물손괴)	24
	폭처법위반(특수재물손괴)	1
	소계	320
위증	위증	172
	위증교사	40
	소계	212
장물	업무상과실장물취득	4
	장물알선	30
	장물양도	1
	장물운반	1

(단위: 명, %)

범죄분류	사건명	조사건수
	장물취득	92
	소계	128
절도	상습절도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44
	야간방실침입절도	35
	야간주거침입절도	159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54
	절도	1,438
	절도교사	1
	절도미수	98
	특가법위반(절도)	803
	특가법위반(특수절도)	1
	특수절도	871
	특수절도미수	89
	소계	3,712
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384
	특가법위반(조세)	13
	소계	397
지적재산권	상표법위반	203
	저작권법위반	44
	소계	247
폭행	존속폭행	1
	특가법위반(보복폭행)	2
	특수폭행	7
	폭처법위반(공동폭행)	11
	폭처법위반(야간,공동폭행)	166
	폭처법위반(야간집단,공동폭행)	1
	폭처법위반(야간집단,흥기폭행)	23
	폭처법위반(집단,흥기폭행)	36
	폭처법위반(특수폭행)	2
	폭행	157
	소계	406
협박	특가법위반(보복협박)	8
	특가법위반(특수협박)	1
	특수협박	63
	폭처법위반(공동협박)	1
	폭처법위반(야간,공동협박)	42
	폭처법위반(야간,흥기협박)	3
	폭처법위반(야간집단,흥기협박)	29
	폭처법위반(집단,흥기협박)	61
	폭처법위반(특수협박)	4
	협박	29

(단위: 명, %)

범죄분류	사건명	조사건수
횡령	소계	241
	업무상횡령	547
	업무상횡령방조	1
	점유이탈물횡령	35
	특경가법위반(횡령)	44
	횡령	283
	소계	910
기타범죄	가스방출	18
	간통	329
	감금	8
	감금치상	25
	강제집행면탈	3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11
	건설사업법위반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7
	건조물침입	6
	건축법위반	83
	경범죄처벌법위반	19
	골재채취법위반	19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공무상표시무효	30
	공용서류무효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1
	관광진흥법위반	46
	관세법위반	10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9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81
	권리행사방해	2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65
	농지법위반	77
	담배사업법위반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4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32
	대외무역법위반	19
	도로법위반	201
	도박	87
	도박개장	475
	도박개장방조	18
	명예훼손	123
	모욕	38
	문화재보호법위반	1

(단위: 명, %)

범죄분류	사건명	조사건수
	밀항단속법위반	2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8
	방실침입	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에대한 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59
	범인도피	46
	범인도피교사	2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변조유가증권행사	3
	보건범죄(부정의료업자)	165
	보건범죄(부정의료업자)방조	1
	보건범죄(부정의약품제조)	1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3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39
	부동산중개업법위반	6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103
	산림법위반	5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32
	산지관리법위반	61
	상법위반	19
	상습도박	14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5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1
	석유사업법위반	1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46
	성폭력범죄(카메라이용촬영)	29
	소방법위반	17
	수산업법위반	81
	수질환경보전법위반	30
	식품위생법위반	19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26
	약사법위반	64
	업무방해	27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5
	여권법위반	3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65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2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24
	외국환거래법위반	60
	위조유가증권행사	30
	위조유가증권행사미수	1

(단위: 명, %)

범죄분류	사건명	조사건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2
	유가증권변조	15
	유가증권위조	76
	유가증권위조방조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48
	윤락행위방지법위반	6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39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	62
	음화반포	1
	의료법위반	78
	일반교통방해	56
	입찰방해	19
	자동차관리법위반	1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1
	전기통신사업법위반교사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8
	정보통신망(명예훼손)	40
	정보통신망(음란물유포)	79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침해)	41
	정치자금법위반	27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	1
	주거침입	36
	주차장법위반	20
	중감금	1
	중감금치상	1
	증권거래법위반	44
	지방공무원법위반	27
	직업안정법위반	7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5
	청소년보호법위반	149
	청소년성보호법위반	11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요행위)	21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	136
	청소년성보호법위반(알선영업)	22
	청소년성보호법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25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31
	출입국관리법위반	5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15
	컴퓨터장애업무방해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8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23

(단위: 명, %)

범죄분류	사건명	조사건수
	퇴거불응	2
	특가법위반(관세)	17
	특가법위반(산림)	25
	특가법위반(영리약취,유인)	18
	특가법위반(통화위조)	16
	특수주거침입	1
	폐기물관리법위반	59
	폭발성물건파열미수	1
	폭처법위반(강요)	3
	폭처법위반(공동감금)	4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4
	폭처법위반(공동퇴거불응)	1
	폭처법위반(단체의구성,활동)	28
	폭처법위반(야간,공동감금)	57
	폭처법위반(야간,공동강요)	18
	폭처법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38
	폭처법위반(야간,주거침입)	1
	폭처법위반(야간감금)	1
	폭처법위반(주거침입)	1
	폭처법위반(집단,흥기주거침입)	1
	하천법위반	1
	한국마사회법위반	27
	해군기지법위반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66
	허위유가증권행사	1
	소계	7,022
전 체		42,371

※ 약어

- 보건범죄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폭처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특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특경가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평가

- 31개 주요 범죄유형의 조사건수가 대부분 최소 20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음
-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물범죄(125건), 변호사법위반범죄(128건), 뇌물범죄(143건)도 유의미한 통계분석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건수가 조사되었음
- 개별범죄의 경우도 양형 현황을 파악하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조사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7. 양형자료조사 집행 보고

다음과 같은 근거로, 위원회 제4차 회의 의결에 따른 과거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를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위원회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을 보고

가. 양형실무 현황 파악을 위한 충분한 양형자료 확보

- 양형자료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 양형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에 필요한 분석자료 및 양형기준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지금까지 조사된 양형자료만으로도 기존 양형실무에 따른 양형의 폭과 편차를 분석·확인함으로써 양형 현황을 파악하고, 양형기준 설정의 참고자료로 삼기에 충분함
- 특히 31개 대표죄명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연구에 필요한 통계분석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로 조사가 완료되었음

나. 위원회 일정의 차질 없는 진행 도모

- 전문위원 연구의 기초자료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전문위원 연구를 촉진하고, 그로 인하여 위원회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조사 이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1달 반 ~ 2달 가량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정을 고려할 때 남은 약 27,000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경우 전문위원의 연구가 3 ~ 4개월 이상 더 지체되고, 그에 따라 위원회 전체 일정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됨
- 통계기법상 조사 건수가 증가할수록 분석의 신뢰도가 다소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음

다. 실질적으로 조사가 용이한 사건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완료

-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을 살펴보면, 법인 피고사건, 항소심 무죄 등의 사유로 조사의 필요성이 없는 사건 482건, 폐기, 분실 등의 사유로 기록을 대출할 수 없는 사건 5,156건, 판결문 미등록 사건 12,388건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미조사 경위에 비추어 조사가 용이한 사건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완료되었음

라.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철저하고 광범위한 양형자료조사 작업 수행

- 조사된 사건의 수 뿐 아니라, 사건기록을 대출하여 판결문과 대조하면서 양형조사표를 작성하는 조사방식의 엄격성 등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철저하고 광범위한 양형자료조사 작업이 실시되었음
- 미 연방과 일부 주의 경우에도 양형기준 설정 전에 유죄판결을 양형자료로 활용하여 과거 선고형을 분석한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판결문에 기초한 양형자료조사에 그쳤다는 점에서, 본 양형자료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마. 분석의 신뢰도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앞서 본 범죄유형별 및 범죄별 조사 현황을 보더라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분석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건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음
- 전체 모집단의 사건 수를 기준으로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최소 표본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본 결과, 당해 조사건수는 검토된 최소 표본수 요건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없음

◆ 최소 표본수 산정 ◆

▶ 필요성

표본조사에서 표본의 크기가 크면 조사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작정 표본의 수를 크게 하면, 비용과 조사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적절한 최소 표본수를 구해야 함

▶ 산정 방법

- ▶ 본 검토에서는 신뢰계수와 함께 표본오차 정도를 통한 적절한 최소 표본수를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행하였음
- ▶ 표본크기(n)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표본분산, 표본평균, 표본비율 등과 같은 추정 값이 주어져야 하지만, 본 조사에서는 표본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기에는 조사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표본에 대한 추정 값을 제외하고, 모집단의 크기(약 85만 명)가 주어졌기 때문에 모집단의 크기에 비례한 적합한 표본크기의 산정을 위하여 표본비율을 0.5(전체 1 기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식2)을 반영한 표본크기를 정하였음

$$n(\text{표본크기}) = \frac{N \times (\text{신뢰계수})^2 \times p \times (1-p)}{N \times (\text{표본오차})^2 + (\text{신뢰계수})^2 \times p \times (1-p)}$$

$$n \geq \frac{N}{\left(\frac{e}{k}\right)^2 \frac{N-1}{P(1-P)} + 1}$$

N = 모집단수

신뢰계수 = 95% : 1.9599, 99%: 2.5758

p = 비율(비율이 부여되지 않으면, 기본비율인 0.5로 부여함)

e = 표본오차

- 위의 표본크기를 구하는 식은 모집단 크기(N)를 반영하여 표본의 크기를 구하는 것으로 모집단의 크기에 따라서 표본크기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음

▶ 산정 결과

- 이러한 표본크기 구하는 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남

신뢰계수	표본오차	표본크기
95%	0.05	383명
99%	0.05	665명
95%	0.01	9,483명
99%	0.01	16,297명

- 일반적인 설문조사 등에서는 95% 신뢰계수에 표본오차 0.05를 반영하는 표본크기를 활용하며, 위의 내용은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표본의 크기는 위에서 나열한 표본크기보다 크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표본크기의 증가는 표준오차를 감소시키며, 이로 인한 신뢰구간의 구간길이를 작게 만드는 효과를 보임

▶ 결론

모집단 크기를 85만 명으로 전제할 때 99% 신뢰계수, 표본오차 0.01의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16,000명 정도이므로, 당해 조사건수는 위 공식에 따른 최소 표본수의 요건을 충족함

2) 노형진, 정한열 공저, 'STATISTICA에 의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 형설출판사, 2002, 65쪽

II. 양형자료조사 2차 분석

- 별첨 「양형자료조사 2차 분석 보고」 기재와 같음

Ⅲ. 전문위원 업무 지원

1. 전문위원 위촉식 행사 지원

- 일 시 : 2008. 3. 17.(월) 11:40 ~ 12:00
- 장 소 : 위원회 위원장실
- 참석범위 : 위원장, 상임위원, 운영지원단장 등
- 위촉대상자 : 김소영 수석전문위원, 김현석 전문위원

2. 전문위원 회의 지원

- 운영지원단(기획운영과)은 전문위원 전체회의 및 팀별 회의의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회의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임시 1차	2008. 4. 4. 16:00	○ 양형통계분석 강의 수강
	제7차	2008. 4. 15. 14:00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총괄팀 회의	제6차	2008. 3. 21. 15:20	○ 전문위원 연구 활성화
1팀 회의	제7차	2008. 3. 21. 17:00	○ 전문위원 1팀 연구 일정
	제8차	2008. 3. 27. 10:00	○ SPSS 분석 프로그램 강의 수강

회의명		일 시	안 건
	제9차	2008. 4. 11. 16:00	○ 양형인자 정리를 통한 양형자료 분석틀 마련
2팀 회의	제7차	2008. 4. 15. 16:00	○ 양형인자의 추출
특별연구팀 회의	제5차	2008. 3. 20. 10:20	○ 양형기준의 설정 원칙 ○ 특별연구팀 연구 일정
	제6차	2008. 4. 10. 14:20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3. 1차 통계분석결과 설명회 개최

○ 목적

제1팀 전문위원들을 상대로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한 통계분석기법 및 1차 통계분석 경과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제1팀 과제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양형 현황 및 문제점’ 연구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 개요

- ▶ 일시 : 2008. 3. 27.(목) 10:00 ~ 12:00
-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 설명 담당자 : 운영지원단 선창민 통계분석 실무관

4. 전문위원 분석업무의 지원체제 구축

○ 개요

선창민 통계분석 실무관을 전문위원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전문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거나 전문가 조언을 제공하고, 조사된 양형자료 및 SPSS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문위원이 원하는 통계분석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음

○ 실시

전문위원 제1팀 9차 회의시(2008. 4. 11. 16:00 ~ 23:00)부터 시행

IV. 연간보고서 발간

1. 개요

- 2008. 3. 10.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2007년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확정 의 건’(의안번호 제2008-4호)이 의결됨에 따라 연간보고서 발간을 추진 중임

2. 추진 내역

-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의결 : 2008. 3. 10.
- 보고서 초안 작성 및 견본 제작 : 2008. 3. 11. ~ 4. 2.
- 보고서 초안 위원 회람 : 2008. 4. 3. ~ 4. 15.
- 보고서 초안에 대한 교정 작업 : 2008. 4. 3. ~

3. 향후 일정

- 2008. 4. 말까지 연간보고서 제작을 완료하여 국회에 보고할 계획임

V. 온라인 설문조사 시행

1. 목적

- 일반 국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법원 홈페이지 양형위원회 코너와 양형위원회 블로그에 설문문항을 게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여 양형제도와 정책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함

2. 시행 내용

- 설문게재 기간 : 2008. 2. 27. ~ 3. 27.
- 설문게재 공간
 - ▶ 대법원 홈페이지 양형위원회 코너
 - ▶ 양형위원회 블로그(<http://blog.naver.com/yhstory2007>)
- 설문 응답자 : 응답자 103명
- 향후 일정
 - ▶ 2008. 4. 11. 정보화 심의관실에 설문조사 결과 분석 의뢰
 - ▶ 2008. 5. 분석결과 보고 예정